

■ 발행인: 지재식 ■ 편집인: 최광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여백(02-2279-9631)

4월 투쟁을 시작으로 한미FTA, 비정규개악법 분쇄하자

전국조합간부, 순환파업 및 한미FTA저지투쟁 적극 결합

KT노동조합을 비롯한 IT연맹이 비정규개악법과 한미FTA 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한미FTA와 더불어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의해 노동유연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개악법은 이제 노동계의 사활을 건 투쟁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자본은 자신들도 개방하지 않은 통신사업까지 개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KT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4대요구인 한미FTA 저지, 사회양극화 해소,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를 외치며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

민주노총 순환파업

민주노총 순환파업 이틀째인 11일 여의도 집회에 IT연맹이 비롯 건설연맹, 전국화학섬유연맹, 여성연맹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여의도 집회는 수도권지방본부 상집과 대구지방본부, 강원지방본부 조합간부들이 참석해 IT연맹이 200대을 넘어섰다. 조합간부들은 총파업 4대 요구를 외치며 열린우리당사까지 행진했다. 또한 서울시민에게 “론스타와 같은 외국자본이 세금 환급 내지 않고 온갖 불법을 동원해 국부를 유출해가고 있다”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통신서비스를 비롯한 전산업의 황폐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한편, 집회와 병행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미국 정부, 미의회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투쟁도 병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항의의 메일을 통해 “사회양극화의 정점, 비정규개악법을 온 힘을 다해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서러운 용어 자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싸울 것을 당신들 앞에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 대통령에 보낸 항의의 메일에는 “대부분의 한

국 사람들은 세계화라는 미명 하에, 세계 속에서 미국화되는 것을 거부한다”며 자유무역 협정에 진행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지난 15일에는 한미 FTA 저지 1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신자유주의에 맞서 통신주권사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 대학로에 모인 노동자, 농민, 문화예술인,

학자, 학생, 기자, 시민단체 1만5천여명은 한목소리로 ‘한미 FTA 반대’를 외쳤다. 3월 28일부터 전국의 270여개 단체가 참여 출병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일부터 지역순회 문화제를 열어왔으며, 15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IT연맹도 1백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통신개방 저지’를 위한 결의를 높였다. KT노동조합은 중앙상집 및 수도권 상집, 본사지방본부 상집, 지부장,분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사전 결의마당으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허영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책위원장은 “미국의 재정적자는 약 1조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1경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이라며 “미국은 자신들의 적자를 전 지구적 인플레이를 통해 매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처럼 규제되지 않은 투기자본이 한미FTA를 통해 국내의 자산을 빼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어 진행된 본대회에서 안성기 영화인 대책위 공동대표도 “3월7일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한미FTA 저지 투쟁에 영화인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미 FTA는 공공부문과 산업 전반을 미국의 입속에 넣으려는 음모”라면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나서서 한미 FTA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회는 대학로에서 시작해 종로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9일 각계 사회단체의 비상시국선언에 이어 다음달 4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민총력”을 계획중이다. 또 협상이 열리는 6월5일부터 9일까지 미국원정투쟁을 벌이며 7월 서울협상시 대규모 국민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조합 간부 역량강화교육 6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역량강화교육은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주간 시행된다

6주간의 교육이 닳을 올렸다. 노동조합은 2006년 조합간부 역량강화를 위해 19일부터 매주 1기수씩 강도높은 교육을 실시한다. 조합간부들은 입소와 동시에 교육을 시작해 2박 3일동안 ▲노동자의 삶과 철학 ▲경영참여 ▲복지 ▲간부의 역할과 자세 ▲임금구조 ▲노사관계로드맵 ▲쟁점 노동관계법 ▲선전선동 ▲자주적 노사관계 ▲KT노조 조직 실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19일 입소한 1기 교육생들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강의와 토론을 거듭하면서

피곤한 기색없이 교육에 임했다. 첫 강의에 나선 이석현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삶과 철학을 강의하면서 “1953년 제정된 최초의 노동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가장 보호하는 법이었다”며 “정권과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법을 후퇴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권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공격해오지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장본인이 노무현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우리는 교사, 교수, 공무원 등이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노동조

합을 결성하는 등 노동운동의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참가와 관련해 최광수 정책기획실장은 “칼아리칸과 KT&G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국자본의 공격에 KT도 속수무책”이라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는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 보장, 외국자본의 위협으로부터 생존권 방어 등 3마리의 토끼를 잡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주중에서 보았듯이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보다 소액주주의 지지가 훨씬 많았다는 것에

우리의 활동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강북지방본부위원장은 조합간부의 역할과 자세를 강의하며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며 노동자의 요구와 목표를 가진 계급조직”이라며 “조합간부가 끊임없는 선전활동과 조직활동을 통해 노동조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합간부들은 예상되는 사측의 임금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 토론하며 “사측이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는 임금삭감·임금피크제 등은 재고의 가치도 없

다”며 “2006년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근접한 제시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금인상을 요구할 때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날조하는 사측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조합간부들은 “경영악화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고 허수경영이나 일삼는 경영진이 어떻게 조합원들의 고용을 이야기 할 수 있겠냐”며 “고용보장의 길은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결의를 모았다.

“노동자의 피와 땀을 내보내! 도둑놈들이!”

이들의 비자금은 노동자들의 돈이다.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동결을 주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경영사정이 어려워진다고 생떼를 쓰더니 자신들의 후계구도를 위해 수백 수천억을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GM대우 비정규노동자들은 철탑에서 한달동안 고공 농성을 단행했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하이스코, 기룡전자, 코요롱 등 수많은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경찰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용역업체들의 폭력을 견뎌내고 있다.

현대차의 정세는 수백억 수천억 해쳐먹고도 땀땀하게 대검찰청을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시위하는 현대자동차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경찰의 폭력연행에 개골러가는 장면이 TV화면에 비춰진다.

이제 분노를 조직하자! 그리고 이렇게 외치자! “내 땀을 내보내 도둑놈들이!”

당신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민주노총 제116주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
5월 1일(월)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비정규 개악인 폐기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 민주적 노사관계 쟁취
노동자 정치세력화 쟁취 · 5.13 지방선거 승리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 한미FTA폐기

가꾸어가는 세상 바로보기
비자금과 비정규노동자

FTA로 무너진 멕시코, 한국이 따라가나

NAFTA체결 10년 실업율 15.1%로 증가, 실질임금 80%로 하락

“Never will we negotiate a free-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우리는 결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에보 모랄레스 블리비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다. 멕시코는 2003년 11월 일본과의 FTA를 끝으로 더 이상의 FTA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멕시코 - NAFTA 10년의 결과

멕시코 정부와 미국정부는 1994년 NAFTA를 체결하면서 외국인투자자와 GDP, 고용이 증가할 것이고 선전하며 양국의 보호무역주의자들과 환경시민단체, 노조를 설득했다. 참여정부의 한미FTA협상 대국민 설득 논리와 동일하다. 1994년 당시의 멕시코와 미국, 2006년 한국과 미국의 평균관세율의 차이도 비슷하다. 멕시코가 1993년 OECD에 가입한 1년 후에 외환위기를 겪은 점도 같고 비슷하다.

NAFTA 체결 이후 10년, 멕시코의 실업률은 9.7%에서 15.1%로 증가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60% 증가하고 반면 실질임금은 최고 80%까지 떨어졌다. GDP대비 기업이익과 노동수입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양극화는 심화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주가의 시세차익과 기업 매매차익을 챙겨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형태의 포트폴리오 현상이 주를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이 발생했고 금융업은 90% 이상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 갔다.

멕시코 수출품의 90%가 미국으로 향하고 수입품의 85%는 미국에서 들어온다. 미국시장 지향형 노동집약 생산기지로 변한 것이다. 경제동조화 현상은 2001년과 2002년 미국의 경제침체 시에 멕시코의 대미수출 5%, 1인당 GDP 2.5%, 마킬라도라의 고용이 20%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킬라도라와 하와이왕조 몰락



마킬라도라는 미국의 원료 장비를 무관세로 수입하여 조립 가공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공장지대이다. NAFTA체결 후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마킬라도라는 외국인만 소유할 수 있고 미국계 초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마킬라도라는 하와이의 미국 흡수통합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은 영국과의 무역 분쟁이 악화되던 1820년대부터 1930대까지 약 120년간 평균관세율 48%의 보호무역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 기간 중인 1890년에 미국은 지나친 재정확자가 정치문제가 되자, 보호가 필요 없던 설비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그런데 미국의 설비관세 폐지는 하와이 왕조 몰락과 미국으로의 흡수통합의 원인이 되었다.

하와이는 1875년부터 이미 설비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하와이에 대규모 사탕수수농장을 지어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서 엄청난 소득을 누리고 있었다. 1890년 미국이 설비관세 폐지하자 쿠바의 설비수입이 증가했다.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탕수수농장주들은 아예 하와이 왕조를

밀어내고 미국으로의 흡수통합을 추진해 버렸다. 한나라 경제를 외국기업에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역사적 경험이다. 혹시 제주도특별자치구가 미국에 흡수통합되는 것은 아닐까?

글로벌 스탠다드만이 살길이다?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는 한미 신년 교류회에서 한미FTA가 양국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와 물류허브로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했다. 버시바우 대사의 말은 우리 정부의 말과 똑같은데, 2005 주한미상공회의소의 정책보고서의 내용은 정부의 정책과 너무도 일치한다.

정부는 미국이 한미FTA 협상개시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4가지, 즉 의약품, 자동차, 쇠고기, 스크린쿼터 관련 통상요구를 수용했다. 기가 막힐 일은 우리 정부와 국내의 제약업체 간의 의견조율 자리인 ‘의약품 워킹그룹’에 미국 대사관 관리가 3년 동안 고정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이다.

‘자동차 워킹그룹(실무회의)’은 아예 미국 측 요구에 의해 운영한 것이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한 예는 없었고, 미국 정부와 우리 업체들이

만나는 워킹그룹도 없다. 정부는 미국의 에너지, 통신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 요구를 수용할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의료검검주의 금융시스템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도 추진 중이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미국의 대형 Investment Bank와 헤지펀드의 국내 진출이 허용된다.

금융업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대적인 통폐합이 예상되고 보험업과 중소기업 증권사들은 구조조정과 파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기자본율이 골드만 삭스나 모건 스탠리의 5%에 불과한 4대 증권사도 안심할 수 없다. 언제 그들에게 합병당할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 웰스트리트의 민간금융업은 고도의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금융거래와 기업사냥에서 거대한 부를 형성해 왔다. 금융감독 기술과 체계가 허술한 우리가 그들의 업무행태를 감독할 능력이 생기기 전에 우리 기업이 기업사냥의 먹이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SK와 소비련의 경영권 분쟁 문제는 SK가 그 위력을 모른 채 소비련 자본에 부여한 Put-Option이 발단이었다. 론스타와 뉴브리지캐피탈이 다국적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로 거대한 시세차익을 챙겨 국부를 빼가도 통제, 감독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대형 민간금융업이 국내 금융업을 장악한다는 것은 비단 금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들의 업무행태에 둔감하여 설비투자형 장기투자를 얻어내기가 힘들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기업사냥에 걸려 미국의 손에 넘어가고 소수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몇 개 기업만 살아남을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구나 전라북도 학교급식조제 판결의 사례처럼, 공공성과 취약산업 보호 취지의 국내 법률들은 시장과 경쟁논리의 한미FTA협정 위반으로 무효 판정을 받은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스탠다드 이식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할 일이다.

미국과 경쟁하려면 제대로 알아라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기본전략은 2001년 무역대표 로버트 졸릭의 ‘American Trade leadership: What is at stake?’의 연설에 정리된 적극적 자유무역정책 추진전략(Activist Trade Strategy)이다. 다자협정, 지역협정, 양자 협정을 동시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다른 나라들 사이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쟁심을 촉발해서 자유무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유럽, 북미, 아시아의 3국 체제가 형성되고 중남미마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미국은 세계 중주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지역통합을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은 3월 6일 한미FTA예비협상에서 중국산 원자재나 중간재 사용제품과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런 의도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가 공격적 개방통상정책을 추구하는 우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준비 없이 미국의 FTA 확산 전략에 말려 든 것이다.

미국도 산업화 초기인 1820년부터 1940년대 전까지 평균관세율 48%의 보호무역주의 국가였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승리였다. 농업 중심의 남부는 값싼 영국제 공산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길 원했지만 반대로 제조업, 금융업 중심의 북부는 영국 산업으로부터의 강력한 보호정책을 원했던 것이다. 자국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 확대에 나서며 개방과 자유무역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이다.

미국도 보호무역으로 성장한 국가다

한미 FTA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나 한국 통상본부장 방미 때 FTA선결조건 해결 보장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농업·자동차·영화·의약품 등이론바 4대 현안의 해결을 보장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의회의 서한이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유보 등 4대 현안을 협정 추진을 위해 미국에 양보한 것이 아니라 주장해온 것과 배치된다. (한겨레)가 23일 단독 입수한, 미 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17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김현중)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농업·자동차·영화·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고 명시돼 있다. 미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농업·자동차·영화·의약품 등 관련업계로부터 한국시장 접근에서의 어려움과 무역장벽에 관한 우려를 들었다”며 “(우리는) 이런 우려를 같이 하며,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서한은 공화당 소속 비토 포셀라 하원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한-미 통상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서한 작성 시점은 김현중 본부장이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

미국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통합해 가는 경험을 장기간 축적한 나라다. 미국 USTR은 통상관련 부처 간의 정책조정과 민간부문의 의견수렴, 정부와 의회의 조율을 기본 업무로 한다. 또한 의회는 다양한 소위원회 활동과 협정승인권 등을 통해 의회로부터 협정체결권한을 받아 활동하는 정부를 통제한다.

USTR은 의회에 협상의 목표를 제시하고 의회는 이를 평가하여 협상체결권의 연장 여부에 반영한다.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국산업을 위해서는 WTO의 위반 판정을 받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제도를 유지하며 휘두를 막강한 힘이 있다. 1962년 무역법에는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을 창설하여 수입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이나 마르티노법이 없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가적 존망이 달린 정책 결정에 어떠한 통제 시스템도 없는 것이다. 체계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할 단위로 없고 정책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기관도 없다. 통상정책에 관여할 국회의 권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전에 소관 상임위원 문광부에 사전통보도 하지 않고, 한미FTA협상 체결 몇 시간 전에 연 공청회가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어도 절차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무지한 소리를 한다.

한미FTA를 통해 정부가 미국에 요구할 것이 무엇인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전혀 모른다.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GDP성장의 업적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독주와 오만함을 벗어나서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10개월만에 협상을 완료하겠다고 덤비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에 귀기울여 한다.

한미 FTA 경제효과, 조직과 은폐 권영길 의원 “관련책임자 문책 요구”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근거로 자주 인용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의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장난 수준의 통계조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바로 그 데이터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겸 총리 대행에게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무역흑자 감소분 73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둔갑... 재경부는 관련자료 삭제

권영길 의원이 제기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데이터 조작 의혹은 KIEP가 지난 1월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1월 보고서)’를 3월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3월 보고서)’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대미 무역흑자 감소분이 51억 달러에서 73억 달러로 늘어나자 이 수치를 47억 달러로 조작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권 의원은 정부와 KIEP가 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일반에 공개한 3월 보고서에서 무역수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일괄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미 FTA가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 간의 무역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분	단기효과	자본축적모형			
		생산성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제조업	제조업+서비스업	
실질GDP	0.42%(29억달러증가)	1.99%(135억 달러 증가)	7.75%(352억 달러 증가)	7.75%(352억 달러 증가)	
GDP(금액기준)	0.15%(10억 달러 증가)	6.65%(302억 달러 증가)	6.65%(302억 달러 증가)	6.65%(302억 달러 증가)	
후생수준	0.61%(24억 달러 증가)	1.73%(68억 달러 증가)	6.99%(281억 달러 증가)	6.99%(281억 달러 증가)	
대미수출	12.1%(54억 달러 증가)	15.1%(71억 달러 증가)	25.9%(94억 달러 증가)	27.3%(99억 달러 증가)	
수입	29.1%(96억 달러 증가)	39.4%(122억 달러 증가)	57.08%(166억 달러 증가)	58.96%(172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	42억 달러 흑자 감소	51억 달러흑자 감소	73억 달러 흑자 감소	72.7억 달러 흑자 감소 (47억 달러로 수정)	
생선(금액기준)	0.61%(8.5조원 증가)	1.94%(27.0조원 증가)	6.18%(86.0조원 증가)	6.18%(86.0조원 증가)	
고용	-0.51%(85천명 감소)	0.63%(104천명 증가)	3.30%(551천명)	4.04%(674천명)	

장벽을 허무는 협정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무역수지와 관련된 데이터가 빠져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데이터 조작 및 은폐에 관여한 사람으로 한덕수 총리 대행과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측 핵심 인물들을 정면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은 한 총리 대행과 김 본부장 등이 데이터의 조작과 은폐를 위한 비밀회의를 열었다고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한미 FTA라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조작됐다”며 “이 조작이 어느 수준에서

요구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총리 대행은 권 의원이 제기한 이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하며 “각각 다른 수치가 나온 것은 연구의 가정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KIEP로 하여금 어떤 전체 하에서 이런 수치들이 나왔는지 보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단계는 데이터 조작... 2단계는 데이터 은폐

시사 월간지 <말>에 따르면 KIEP가 3월 초에 공개했던 3월 보고서 원본에는 무역수지와 관련된 통계가 분명히 들어 있었다. 1월 보고서에 나온 한미 FTA로

인한 무역흑자 감소분은 51억 달러였다. 하지만 3월 보고서(원본)에는 이 수치가 72.7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3월 말 재공개된 3월 보고서 수정본에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무역흑자 감소분이 72.7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갑작같이 변경돼 있다. 권영길 의원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특히 한덕수 부총리가 3월 초에는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말하다가 3월 30일 한 강연회에서 갑자기 “무역흑자 감소분은 47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요구	국민들에게 끼칠 피해
의약품	약값 재평가 개정안 취소	약값 비싸게 책정되어 건강보험료 증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방침 취소	환경오염 가속화
쇠고기	광우병 파동때 금지된 수입 재개	국민 건강 치명적 위협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문화주권 침략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재난이냐?

국가재난안전기본법의 진실... 국가재난 내세워 상시적 통제 강화



노무현 정권의 노동통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한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해 4월 25일 관련 소위에서 다루고 회기내 통과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행정자치위 소속)은 정부의 ‘국가 재난 및 안전기본법’이 ‘재난 예방과 대비를 핑계’로 ‘전 사회영역에 대한 국가개입과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일방적인 법안 통과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편, 행정부에서는 25일경 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회기내 통과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영순 의원이 공개한 정부 측의 <개정안 내용>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은 자연재해, 산불등 화재 그리고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재난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2004년 3월 제정)한다는 내용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기반시설(에너지, 교통수송, 의료, 금융 등 9개 분야)을 행정부(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에서 국가기반시설로 분류하여 해당 업체·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차원에서’ 구축하여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장비를 지정·관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난 또는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의 시각차가 현저하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안은 △행정부에서 노동조합의 행위행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우선한다는 공식입장을 전했으나 국가기반체계에는 전 산업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국가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지정·관리(D/B 구축)·대응할 경우 노동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노동쟁의에 대해서 파업권 침해가 없을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행개정안은 그대로 받을 경우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화물연대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폭넓게 적용 가능하며 △대체인력과 장비를 일상적으로 확보, 비상시 대체인력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파업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이 더욱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정부안은 “사실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들의 단결과 단체행동을 통한 단체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정부안 반대의 핵심인 셈이다. 실제

로 이영순 의원은 “올 3월 화물연대파업 당시 행정부 장관이 이 법안을 준용해 관계기관 대응을 지시했고 건교부에서도 이에 따라 표준메뉴얼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행정부 개정안의 ‘국가기반 지정과 일상적인 대응체계’는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재난’을 이유로 ‘노동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드세다. 그러나 행정부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노동권 제약을 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의 요구를 외면하는 실정이다.

“본 개정안이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쟁의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행정부는 답변을 통해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법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답했고, 답변 내용을 확정해 법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라는 요구와 함께 “(정부 측의)개정안 제 77조 (재난 관리에 대한 문책요구)조항에 대해서도 적용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과 관련한 관리영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명확히 명시하라”는 것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정부안이 ‘노동관계법과의 충돌문제’

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으로써 확실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영순 의원은 지난 14일, 서면질의를 통해 “행정자치부(장관)의 답변은 헌법 제 33조(헌법 제 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와 노동관계법에서 명시한 노동자의 기본3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노동자는 국가기관에 비해서는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고, 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오남용을 막고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 제 8조에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는 민주노동당의 수정안 요구에 대해 확답을 미루는 실정이다. 지난 3월 28일 특수고용노동자등인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이 발생하자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관련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정부단위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점검하여 국민 불편과 물류수송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행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반보호상황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간 상황을 관리, 유관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간 대응책 강구와 사태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각 시도에 지역안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지시하고 지자체별 지역단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적극 대응토록 방침을 정했다.

즉, 화물연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행정부가 문제의 본질인 정부의 비현실적인 운송단거나 운수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등에 주력하기보다는 물류과동원을 내걸어 노동탄압에만 혈안이었다는 점이 노동계 비판의 핵심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억압하고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한 이 개악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강력 경고했다.

■ 민주노총 여성노동교실 참가기

여성이 모여 희망을 보았다

4월 13일 IT연맹 소속 여성간부들과 함께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여성노동교실에 참가하였다.



연맹별로 많은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장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가자들은 여성다운 따뜻함으로 서로를 맞이하였다.

“여성이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자!”는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여성이, 여성으로 살기위해’라는 제목처럼 여성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되었다.

강의는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여성의 힘, 정치세력화’와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의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세상’ 2강으로 진행하였다.

박인숙 최고위원은, 현재 여성의 처지는 ‘몸빼바지에 물동이 이고 고무신 신고, 운동화에 운동복 입은 남성과 동일하게 출발하는 격’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앞선 곳에서 출발하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5.31 지방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한 결과 여성 후보가 전체의 35%에 달하게 된 과정을 그 예로 소개하였다.

조중신 이사는, 성폭력에 대한 정의에서 “동등하지 않은 쌍방 중 힘이아닌 권력을 가진 일방이 힘을 이용하여 타방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와 구체적 사례의 설명과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강연을 경청한 참가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의 활동 보장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및 조직화의 실현방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속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조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직장과 더불어 거주 지역에서는 민주노동당으로서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공유하였다. 여성들의 행사인 만큼 사회적으로 가사, 육아 등 여성들에게 지워진 짐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사업장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달라도 여성이라서 겪는 어려움이 같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껴서인지 행사가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고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의 빛이 역력했다.

회기에예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열정과 의지를 보인 여성 동지들은 ‘외유내강’의 모습 그대로였다. 다양한 공간에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묵묵히 자신의 뜻을 다하고 있는 동지들이 바로 희망이라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마감하였다.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에 가맹원서 제출 전공노 “노동자계급 전체 이해를 위해 투쟁 할 것”

‘법외노조’로 남기로 결정한 공무원노조는 지난 4월 1일 대의원대회 방침 결의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을 공식화하고 20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가맹원서를 공식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민주노총 가입 기자회견’을 통하여 “2002년 3월23일 부정부패, 공직사회 개혁 가치를 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돌아보며 “공무원노조 출범이래 부정부패 척결과 감시활동,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정치적 자유선언, 공무원특별법 약법 저지 총파업 투쟁 등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 건설과 민주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지난 날 군사독재 정권과 민간정부라는 허울아래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며 독점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던 역대 정권 하에서 권력의 시너가 되기를 강요받으며 굴종의 세월을 견뎌왔다”며 민주노총 가입 감회를 털어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민주노총만이 유일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조직”이라고 확인하면서 “민주노총 가입을 계기로 공무원만이 아닌 노동자계급 전체 이해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수많은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농민과 빈민, 청년학생 등 모든 민중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겨냥한 정부의 특별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무차별적인 공무원노조 탄압행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등에 제소하고 시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하여 “2002년 3월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이 아닌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이름으로 공무원노동자는 자주적 선언을 하였다”며 회고하고 “부정부패의 장본인이 아닌, 정권유지의 도구가 아닌 노동자로서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노조가 노력해왔다”고 치하했다.

조 위원장은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공무원노동자의 자존을 지켜왔고 깨끗한 공직사회건설을 위해 힘 없이 투쟁해왔다”고 격려하면서 “공무원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되찾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 동지로서 연대하고 단결하여 투쟁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재난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입장〉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일개 정부부처가 좌지우지하겠다는 위법적 발상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홍식, 이하 IT연맹)은 정부가 또 다시 초법적인 노동탄압 법안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을 행정자치부 발의로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히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의 핵심골자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통신,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9개 분야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 재산,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국가 차원에서 노동기본권을 제약 등 초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국가위기의 규정에 있어 군사, 외교상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9개분야의 상당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그간 정부의 통신노조에 대한 탄압의 행태로 볼때 정보통신분야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할 시점부터 국가통신 마비를 이유로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모든 단체행동이 불법화되어, 사실상 원천적으로 정보통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받게 되는 것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은 “일개 행정부처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위법적인 발상의 결과물인 것이다. 직권중재에 의해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아예 기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권위주의 정부시절 국가의 공권력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할 것이다. IT연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을 비정규개악법안과 함께 반노동자법안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버리고, 이 개악법안의 폐기와 함께 이번 국회 회기내 직권중재 조항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19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5월 1일 노동절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

노동절이란, 메이데이(May Day) 또는 워커스데이(Workers' Day)라고도 한다. 그 유래는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독점기업은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했고, 이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1. 메이데이의 유래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미국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노동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고, 1869년 필라델피아에서 전국 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기사단이 결성되었으며, 1886년 미국 노동총연맹이 탄생하여 노동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노동자들은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에서 경찰의 발포로 어린 소녀를 포함한 노동자 6명이 사망했으며, 다음날 이에 격분한 노동자 30만 명이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위중 갑자기 폭탄이 터졌고, 집회를 주도한 노동운동가 8명이 폭동죄로 체포되어 재판에서 5명은 사형, 3명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헤이마켓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7년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을 경악케 했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889년 7월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설립 대회에서는 미국 노동자의 8시간 노동을 위한 상황을 보고받고, 1890년 5월 1일을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하여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세계적인 시위를 결의했다. 이렇게 메이데이는 시작되었으며,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

한국에서는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이승만 정권아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그러나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 노동 총연맹'의 주도하에 일제 식민지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1946년 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렀다.

날짜도 이름도 빼앗긴 노동절

1957년 이승만은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는 명령을 노총에 지시했다. 이승만이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한 노총은 노총 결성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결정했다.

4월의 함성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박정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여왕벌을 먹이기 위해 아무생각 없이 풀만 나르는 꿀벌처럼 일 잘하는 '근로자'가 필요했다.

무릇 모든 기념일에는 그 날짜에 치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와 의미가 있다.

그것은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인 '피의 헤이마켓 사건', 즉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는 권력과 자본에 맞선 단결 투쟁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

다는,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생생한 역사의 일깨움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날이 아닌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는 의미인 것이다.

아! 다시 되찾은 메이데이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단위노조에서 지역, 업종을 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어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결성하였다. 1989년 투쟁본부는 제100회 메이데이를 앞두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 불명예의 날로 규정하고 굴욕에 찬 지난날의 근로자 인생을 청산하고 한국 전쟁이후 단절되었던 5.1절 노동절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하였다.

1989년 삼남연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연세대학교에 모인 전국 5천여 노동자와 청년들은 전야제를 갖고 4월 30일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1989년 대회 이후 지금까지 민주노조 진영은 해마다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절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오고 있다.

3. 노동절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을 되새기는 기념의 날'

이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절은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의 숭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온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을 되새기는 기념의 날, 당연한 노동운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날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노동절 기념일을 바꾼 것은 그동안 노동절 대회를 힘차게 벌여온 우리 노동자들의 힘과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제 다시 되찾은 5월 1일 노동절은 우리의 지난 6년간의 소중한 투쟁 성과인 것이다.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을 마쳐

우리의 아들딸이 노동자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것

교육이란 항상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 아침부터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이번 교육은 어떻게? 하는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KT노동조합 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1기생으로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을 찾았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박3일의 일정표는 아침7:00 기상을 시작으로 저녁 24:00에 하루에 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의아한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면서 중앙에서 교육 일정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짠 이유가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 첫시간을 맞았다. 이석행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노동자의 삶과 철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한시간, 두시간.. 시간이 거듭 될수록 과목 마다의 열띤 강의가 되고 새벽 면길을 달려 왔음에도 피곤한 내색없이 열중하는 조합간부 교육생들의 초롱초롱한 눈 빛을 보면서 옛 생각이 잠시 뇌리를 스친다. 과거의 피교육생 때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는 교육에 임하는 조합간부들의 자세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나 자신도 더욱더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애정이 굳건해 짐을 느끼게 되고 지부 조합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더 노력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나 자신도 모르게 굳어져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분반토론이 진행되면서 한 번더 놀라움을 느끼게 한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주어진 "주

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가식 없는 열띤 토론이 시작되고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나로 귀결시키는 과정까지 주어진 두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 긴장된 토론을 종료하면서 느낀 점 한가지는 이렇게 조합에 대한 애정을 가슴 속깊게 간직하고 있는 조합간부들을 볼 때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KT노동조합은 건강하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확신해본다. 다양한 분반토론의 발표를 마치고 새벽 한시가 돼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2일차 교육은 주로 사외강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자리에 처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악된 비정규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등의 이야기로 한시간, 두시간.. 시간이 거듭 될수록 과목 마다의 열띤 강의가 되고 새벽 면길을 달려 왔음에도 피곤한 내색없이 열중하는 조합간부 교육생들의 초롱초롱한 눈 빛을 보면서 옛 생각이 잠시 뇌리를 스친다. 과거의 피교육생 때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는 교육에 임하는 조합간부들의 자세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나 자신도 더욱더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애정이 굳건해 짐을 느끼게 되고 지부 조합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더 노력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나 자신도 모르게 굳어져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분반토론이 진행되면서 한 번더 놀라움을 느끼게 한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주어진 "주

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가식 없는 열띤 토론이 시작되고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나로 귀결시키는 과정까지 주어진 두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 긴장된 토론을 종료하면서 느낀 점 한가지는 이렇게 조합에 대한 애정을 가슴 속깊게 간직하고 있는 조합간부들을 볼 때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KT노동조합은 건강하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확신해본다. 다양한 분반토론의 발표를 마치고 새벽 한시가 돼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2일차 교육은 주로 사외강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자리에 처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개악된 비정규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등의 이야기로 한시간, 두시간.. 시간이 거듭 될수록 과목 마다의 열띤 강의가 되고 새벽 면길을 달려 왔음에도 피곤한 내색없이 열중하는 조합간부 교육생들의 초롱초롱한 눈 빛을 보면서 옛 생각이 잠시 뇌리를 스친다. 과거의 피교육생 때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는 교육에 임하는 조합간부들의 자세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나 자신도 더욱더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애정이 굳건해 짐을 느끼게 되고 지부 조합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더 노력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나 자신도 모르게 굳어져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중앙이 낮은 자세로 솔선수범을 실천할 때 지방과 지부, 분회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교육을 계기로 나름대로는 많은 공부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조합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합간부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육을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신 중앙본부 간부님들께 고생의 투쟁인사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동(대구지방본부 복지후생국장)

NTT노동조합 방한 통방융합 등 다양한 통신현안 논의

NTT노동조합이 6일 KT노동조합을 방문해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유무선통합서비스 등 통신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광수 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국은 통신환경에 대한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로 좋은 것을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IT839와 통신방송융합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통방융합의 단일규제기구 및 법적정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NTT노동조합의 겐지시바타 정책교섭국장은 일본의 통신환경과 관련 "초고속 인터넷 분야가 ADSL에서 FTTH(대내 광가입자망)로 진화하고 있고 이동전화 분야는 올 가을 변호이동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은 현재 소프트뱅크가 보다폰을 인수하는 등 통신사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NTT노동조합은 통방융합과 관련

저작권법과의 문제로 인해 IP-TV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만 디지털방송의 빠른 보급을 위해 규제통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NTT노동조합은 상용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 와이브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겐지시바타 교섭국장은 일본의 잡지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와이브로가 세계 각국의 와이맥스 기술도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며 투자 및 수익성의 문제에서부터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했다.

이외 일본의 경우 한국의 지상파 DMB와 유사한 서비스인 '월세그'가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세그 방송은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수익창출이 가능



한 쌍방향 데이터 통신의 구조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TT는 FMC(유무선통합망)와 관련해 원본, 이동통신-유선통신 간 화상통화, 이동전화를 통한 사내데이터 열람 및 포털접근이 가능한 데이터 통신, 통합빌링 등의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해서 FMC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황사란?

황사는 몽골의 고비사막에서 형성되어 이른 봄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황토인데, 최근에는 공업화된 중국대륙의 물에 해로운 실리콘, 알루미늄, 칼륨, 칼슘 등 중금속 오염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황사가 일으키는 질병들은?

- 황사에 많이 노출되면 목이 따갑고 아프며 호흡이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 황사 때문에 목 가기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 눈에 자극성 및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켜 눈이 가렵고 따갑고 빨갛게 충혈됩니다.

철벽, 꼼꼼, 황사 대처법

【외출할 때 마스크는 기본】

마스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답답하더라도 꼭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매일 비누로 깨끗이 빨아 말려 사용해야겠지요.

【외출할 때는 긴소매 옷을 입는다】

중금속을 함유한 모래 먼지 속에서 피부를 보호하려면 가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주, 그리고 깨끗이 씻어라】

황사는 그냥 먼지가 아니라 유해물질이 덩어리입니다.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행구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소금물로 입안을 행구어 준다】

아무리 조심해도 입안에 황사물질이 들어가겠지요 미지근한 소금물로 입안을 행구면 유해물질을 빨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살균효과도 있어 좋습니다.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라】

평소에도 물을 자주 마시면 구강과 기관지 점막에 수분이 공급되어 오염물질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즙, 모과차, 오미자차, 녹차도 좋습니다.

【이런 음식이 특히 도움이 된다】

시력유지와 상피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베타틴 A가 많은 당근, 시금치, 상추가 좋고 가래를 억제하는 도라지, 알칼리성인 콩, 해조류 과 일류가 좋습니다.

【집안청소 구석구석 뒤져줘야 한다】

미세먼지는 창문을 꼭꼭 닫아봐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닥부터 가구까지 걸레로 꼼꼼하게 닦아 주게 좋습니다.

【적당한 환기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황사기간에는 문을 꼭꼭 닫아 놓아 공기가 탁해지고 건조해지기 쉬우니 잠깐씩 환기시키고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널어 습도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올해는 유독 황사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사와 같은 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속으로 직접 들어가 기침, 가래, 염증을 일으키며 기관지 벽을 헐게 하고 기도가 좁아져 숨쉬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황사가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을 알려드립니다.